



진주혁신도시 내 「국방기술품질원」 조감도 및 준공전경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하동군, 국도·철도복선화·갈사만 진입로 등 12곳...1사 1도로 클린제 협약
- 경남도, '민·관 합동 세일즈단' 꾸려 대형건설 사업장 방문 지역업체 참여 호소		
- 경남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민간 전문가 동반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 경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점검·정비		
- 2014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우수 및 장려 수상		
-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경남도, 자연재난대책 매뉴얼전면 보완		
- 경남도, '여름철 풍수해 대책 특별교육' 실시		
- 경남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화 개선에 나선다		
- 김해 대동, 양산 가산 등 산업단지 조성 청신호!!!		
-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서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		
- 진해 두동지구 거버넌스형 개발사업 본격 추진된다		
- 부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 거제시 탁구장 신축공사 착공		
- 다방(호포)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고성민자발전소 SPC 설립 확정		
■ 지식정보	12	- 골든타임제, 인명피해 줄이는 길
- 20세기 폭스사와 테마파크 조성 MOU 체결		
- 한방 향노화산업 클러스터 첫발 뒀다		
- 경남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본격 추진		
- 개발제한구역 내 '기준 건축물 용도변경'대폭 확대		
- 10개 도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한다		
- 국토부 한옥설계 A부터 Z까지 책으로 발간		
- 국가교통 DB를 통해 SOC사업 수요예측 정확성 높인다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 대상지 20개소 확정		
- 공간정보 융·복합... 표준화로 앞당긴다.		
■ 배워서 남주 者	23	
■ 입법예고 및 법령해석	29	
■ 신기술 정보	33	
■ 건설기술심의 현황	34	
■ 계약심사 현황, 기술인 나눔 정보	34	

경남도, '민·관 합동 세일즈단' 꾸려 대형건설사업장 방문 지역업체 참여 호소

경남도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도내 대형 건설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역건설산업 '민·관 합동 세일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세일즈단'은 건설지원과장을 단장으로 경남도 공무원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세일즈단은 김해시, 양산시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현장, 한림-생림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 김해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22개 대형 건설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과 공동도급 참여를 요청하고, 지역 건설자재와 건설장비의 사용 확대, 지역 건설기술자와 노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세일즈는 지역 건설업계가 극심한 공사 수주난을 겪으며 경영위기로 자진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과 하반기 불투명한 건설 경기 전망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주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공공사 뿐 아니라 민간주도 공사에서도 지역업체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장기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번 세일즈를 통해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하여 건설사간 중앙과 지방, 대형과 중소형 업체간 벽을 허물어 건설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길 바라고, 사업현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한다.



경남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민간전문가 동반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 6월 17부터 24일까지 건설공사 현장 안전 점검 실시

경남도는 6월 하순경부터 예상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민간전문가(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와 합동으로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다.

점검 대상시설은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 중 우수기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통영시 사랑 상하도 연도교 가설공사 등 10여 개소를 합동 점검하고, 그 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청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성·절토 구간, 터널, 지하 굴착, 흙막이 시설 등의 안전성 여부, 건축물 등의 침하·균열발생 여부, 배수로·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 관리상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적정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타 시·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량 등 구조물 붕괴사고 사례를 거울삼아 거푸집과 동바리 시공상태 등 구조물에 대한 안전여부를 중점 점검 하였으며,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시공 결함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기 이전에 보완 또는 재시공 조치 하였다.



아울러, 품질 및 안전관리 우수현장에 대하여는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장성 노인병원 화재 등 대형 인명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4

○.....○ 경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점검정비

- ▶ 7월 30일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1,153개소 일제 점검정비
- ▶ 특별교부세 8.5억 원 확보, 스쿨존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 박차

경상남도는 안전행정부 및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1,153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시행된 이후 사업 완료된 802개소를 포함 총 1,153개소에 대하여 도로교통 안전시설 일제 점검으로 정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안전행정부의 교통사고 예방 알림서비스, 생활안전지도 등의 DB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7.30일까지 실시되며, 시·군에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도, 민간전문가, 안전행정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중앙점검반이 경남도의 스쿨존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스쿨존 기본현황, 교통안전 시설, 도로안전시설, 단속 장비, 제한속도 및 불법 주정차 표시현황, 그리고 스쿨존 지정 범위 변경 등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년 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위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스쿨존 내 횡단보도 위치 부적정, 속도 제한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에 추가로 건의하여 8월중에 정비 계획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는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지난 15일 특별교부세 8.5억을 교부 받아, 지방비 포함 총 17억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이면도로의 보·차도분리, 교차로 개선 등의 통학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정비대상지는 우선 9개 시·군, 1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금번 스쿨존 운영실태 및 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통하여 관리현황 현행화로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시설 등의 보수 및 지정 범위 확대구간 미개선 시설에 대한 스쿨존 개선사업

으로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스킨카운터 교통사고 제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6



2014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우수 및 장려 수상

▶ 국비 25억원 추가 사업비 확보

경남도는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2014년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전에 참여하여 전국 60개 대상 소하천 중 함양군이 우수, 거창군이 장려에 선정되어 2015년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25억원(함양군 15, 거창군 10)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함양군 서하면 은행천은 은행나무와 돌담을 소재로, 거창군 위천면 강천천은 역사와 자연을 수승대 관광지와 연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놀이 쉼터를 함께 조성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의 심사 기준은 치수, 생태·친수, 지역 특성, 주민 참여도 등 엄격한 기준으로 12명 심사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선정하는 것으로서 재정 인센티브로 국비 25억원을 추가 지원 받게 되었다.

올해 공모전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난 4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5월21일 1차 심사에서 25개 소하천을 선정하고,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6월9일 아름다운 소하천을 최종 선정하였다.

한편 우리 도는 '11년 최우수(함양군 은행소

하천), 12년 우수(양산시 원동천), '13년 우수(거제시 교항천)상을 수상하여 연속 4년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하천사업의 우수성과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하천관리담당
(055)211-3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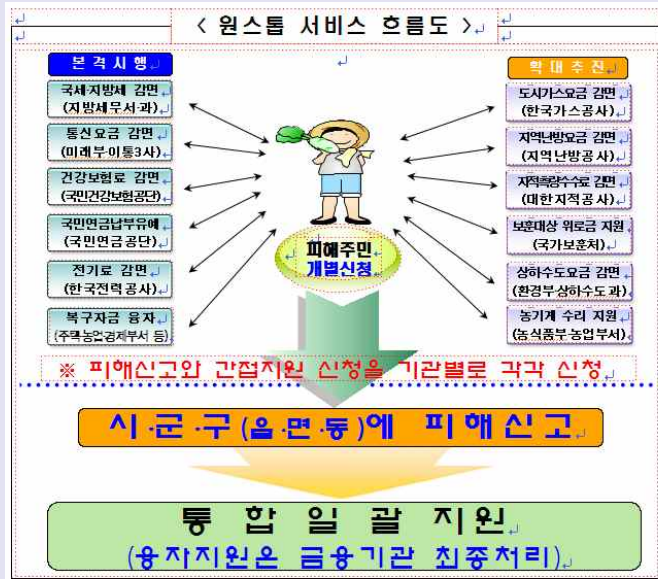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경남도는 여름철 자연재해 시 피해 주민이 피해 신고만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철 풍수해(태풍, 호우 등)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주택,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소상공업, 중소기업) 발생 시, 피해주민이 피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 후 재난등급에 의거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나, 세제·요금 감면, 사유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 등 2차적인 간접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주민이 간접지원 신청을 해당 기관별로 각각 직접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경남도에서는 금년부터 피해 발생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원스톱 서비스는 피해 주민이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만 작성하여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피해 자료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재되고 동 자료를 중앙(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간접지원 대상자 처리기관에 직접 통보하여 피해 주민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주민은 사유시설 피해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금년에 즉시 시행되는 간접지원 서비스 지원 항목은 7개 항목으로서 건강보험료·지방세·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세납기유예, 복구자금 융자가 해당되나, 피해대상 지역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간접지원 항목의 수는 다를 수 있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 (055)211-4196

경남도, 자연재난대책 매뉴얼 전면 보완

▶ 현실성 있는 매뉴얼 정비와 여름철 풍수해 피해 대응체계 구축

경남도는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난대책 매뉴얼을 전면 보완했다.

매뉴얼의 주요 개선 내용은 재난 유형별, 단계별로 담당공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책임전담제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을

위한 90분 골든타임제,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매뉴얼 마련이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동일한 유형의 재난 재발방지, 과학적인 피해조사 등 한 단계 앞선 예방과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남도가 올해 여름철에는 풍수해 관련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풍수해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 매뉴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그 밖에도 경남도는 도와 시군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해 업무기능별로 13개 협업 실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실시간 현장 상황 모니터링, 재해상황 분석·판단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정보 제공, 사전 주민대피·통제 등 선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이와 병행해 중요방재시설 596개소, 재해위험지구 231개소, 대형공사장 206개소, 위험구역 50개소, 급경사지 752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535개소 등 재해취약시설 2,370개소에, 전담관리자 3,081명을 지정해 특별관리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동 예·경보시설 320개소, 강우관측시설 352개소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24시간 작동이 가능토록 정비했다.

여름철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대해서는 차량 사전통제 지침에 따라 하천변 하상도로 25

개소, 세월교 58개소, 잠수교 10개소 등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침수예상도로 93개소에 대해 신속한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조치도 완료했다.

그리고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 조기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425억 원을 확보했으며, 피해주민이 피해 신고를 하면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송병권 치수방재과장은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평소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등을 숙지해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 (055)211-4193



경남도, '여름철 풍수해 대책 특별교육' 실시

- ▶ 10일 도청 방재 실무자 100명 특별교육 실시
- ▶ 전 시군 방재담당자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경남도는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대응 태세를 되돌아보고 실질적인 대비책 강구의 일환으로 지난달 10일에 도청 건설방재국 방재 실무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책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6개 권역별 시군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약 920여명의 실무 담당자들이 금번 특별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대처방안에 대해 박우식 경남도 건설방재국장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더불어 공직자의 자세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관련 협조와 당부가 있었다.

경남도 박우식 건설방재국장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인명피해 및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철저한 재난상황근무와 24시간 업무 공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및 도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지역 유관기관과 18개 시·군 및 읍·면·동 등 재해관련 전 기관이 일제 비상관리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 (055)211-4193

경남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화 개선에 나선다

▶ 도내 전 발주부서 공사감독관, 원·하도급 대상 '하도급지킴이' 교육 실시

경남도는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민간과 공유하여 불공정 하도급 문화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교육을 27일 실시했다.

도 발주부서 공사감독관, 시군 회계담당, 교육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350여 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 활용방법 등을 홍보했다.

'하도급지킴이'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체결에서부터 발주기관 확인·승인, 하도급 대금관리, 실적 증명서 발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시스템으로, 발주기관에서 대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경남도 강해룡 회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민주화 실천을 위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팀담당
(055)211-3523

김해 대동, 양산 가산 등 산업단지 조성 청신호!!!

▶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공급 면적 확대 (1.162km²→1.916km²)

27일 국토교통부는 경남도가 신청한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공급면적 변경계획을 원안 고시했다.

변경 계획의 주요 골자는 연간 신규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을 1.162km²에서 1.916km²로 754천m² 확대한 것으로, 신규 공급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그 동안 산업단지 지정 계획 면적 부족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불투명했던 김해 대동·양산 가산 등 신규 산단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경남도와 김해시, 양산시가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김해 대동·양산 가산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는 대동 산단 328만m², 가산 산단 81만m²를 '201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경남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공급면적' 상한에 걸려 지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4월 7일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통합지침은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조성 중인 산단과 미분양 산업용지, 신규 지정계획 면적의 합이 연평균 공급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경남도는 2014년도 신규 지정 계획 물량을 제외하면 더 이상 산업단지 신규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고시된 공급 면적은 전국에서 경기도의 2.1km²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경남이 실수요자에 의한 산업용지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십분 활용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충분하게 공급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산업단지 신규 지정 면적 확대에 따라 여유 면적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항공·나노·해양플랜트 등의 산업단지 신규 지정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단지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와 미래 50년의 성장동력을 확보 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계획담당 (055)211-4343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서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

- ▶ 6월 17일 진주 혁신도시 국방기술품질원 청사 준공식 개최
- ▶ 진주혁신도시 2015년까지 이전 완료, 서부경남 발전촉진 기대



진주 혁신도시에 신청사를 마련한 국방기술품질원이 17일 오후 2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이창희 진주시장, 최정경 경남도 서부권 개발본부장 등과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이번에 서울 동대문에서 진주 혁신도시내로 동지를 튼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품질보증과 국방 연구개발사업 평가, 부품 국산화 개발, 국방마크 인증제도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분야 핵심 연구기관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신사옥은 부지 24,000㎡에 연면적 19,515㎡(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529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올 3월에 준공하였다.

이번 청사 이전을 계기로 경남도와 국방기술품질원이 협력해야 할 분야로는 ▲방위력 개선사업과 경남의 전략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핵심 기술개발 ▲군수품 품질보증 협정을 활용한 해외 방산시장 동반 개척 ▲국방기술 정보통합서비스를 통한 정보공개 ▲인재양성 및 전문 기술교류회 활성화 ▲경남도내 산학연 전문가 핵심기술 기획 참여 확대 방안 등이다.

앞으로 진주 혁신도시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나머지 8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2015년까지 이전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 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3만 1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2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서부경남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타 지역대비 우수한 인프라와 발전 잠재력을 지닌 방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협력함은 물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시책들을 단계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공공기관이전단 혁신도시개발담당 (055)211-6474



진해 두동지구 거버넌스형 개발사업 본격 추진된다

- ▶ 제6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
- ▶ 전국 최초 거버넌스형(민관협력) 개발사업 시행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가 주민참여형으로 본격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제67차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한 주거·첨단물류 산업단지로 두동지구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두동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지역 1.52km²를 첨단생산·주거기능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3년 10월에 개발 지구로 지정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년 8월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간 소통과 참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고, 결국 거버넌스형(민관협력) 개발계획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 거버넌스(Governance)란 : 국가,민간,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연대, 소통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말함.

또, 두동지구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사업비 조달과 주민참여(동의)를 통한 환지와 보상을 혼용한 방식으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는

민관 협력적 개발방식의 모델을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최초로 적용했다.

향후 두동지구 개발의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 후 신항배후 주거단지 건설 등 직접적인 개발비용이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2만 3천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2천여 명의 고용창출도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동지구는 9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와 같이 두동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인접한 웅동지구, 와성지구, 웅천지구, 남산지구 등에도 개발의 효과가 파급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자료 : 경제정책과 경제자유구역지원담당 (055)211-2655

■ 자료 : 밀양시 공보전산담당관
(055)359-5627

부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밀양시 부북면 부북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면사무소회의실에서 6개마을 추진위원 12명과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설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부북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지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되어 2016년 완공이 되는 4개년 연차사업으로 부북면 운전리74번지외 6필지 9,136㎡에 70억원의 사업비로서 복두레 테마광장(게이트볼장, 풋살장, 다목적경기장등)과 복두레 쉼터(원형스탠드, 건천, 돌계단, 파고라 등), 복두레길(안내판, 버스정류장정비, 데크로드 등), 덕곡생태둘레길(황토콘크리트포장, 데크포장, 다리정비, 꽃길조성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면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쉼터 제공과 밀양연극촌, 화악산동지권역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과체육시설 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활동을 영유 할 것으로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거제시 탁구장 신축공사 착공

거제시는 거제시 계룡로11길 35(고현동) 일원 거제시체육관 부지에 총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들여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거제시 탁구장은 지상2층, 건축면적 648㎡ 탁구대 10면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체육관과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거제시 관내 초·중·고에 탁구전문 육성팀 및10개의 탁구동호회에 약 800명의 동호인이 있음에도 전용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거제시탁구장이 준공되면 많은 탁구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거제시 문화공보과
(055)639-3384

다방(호포)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양산시는 양산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7억원을 들여 동면 가산리 일원의 하수관거의 우·오수 분리를 시행, 양산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유입수지 확보와 양산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관거 5.6km와 맨홀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153가구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그동안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의 신규 사업 지양 방침에 따라 당초 하수관거사업의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으나 우리시의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걸쳐 환경부와 기재부에 방문하여 설명한바, 전국 10개소의 문제점 사업지구중 다방·호포지구가 선정되어 33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우·오수 분리를통하여 양산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유입수질 확보로 양산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주거 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자료 : 양산시 하수과 (055)392-5461



고성민자발전소 SPC 설립 확정

- ▶ 20일 개최된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 ▶ 군호마을 이주와 관련된 각종 문제 논의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하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실시한 타지역 발전소 벤치마킹 경과 보고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군호마을 이주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SK건설과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법인설립에 대해 지난 13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7일 법인 설립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발전소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하이면 복지회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SPC 설립으로 발전소 업무가 본격화 되면 가장 시급한 군호마을 이주와 관련된 각종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군호마을 이주를 위해서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군호마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마을 포함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주민과 사업자 간의 협의가 완료되면 SPC는 군호마을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7월 개최 예정인 민자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에 참가할 주민대표와 전문가를 선임하여 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민이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과 SPC간 상생협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에 SK건설과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1조7000억 원씩 투자해 총 3조4000억 원으로 고성화력발전소가 건설됨에 따

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4일 발족됐다.



■ 자료 : 고성군 홍보담당 (055)670-2641



하동군, 국도·철도복선화갈사만 진입로 등 12곳·1사 1도로 클린제 협약

비산먼지로 말미암아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하동지역 주요 공사장 주변은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하동군은 26일 오전 11시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관내 주요 사업장의 현장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사 1도로 클린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1사 1도로 클린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행정규제나 적발위주의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어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장 주변을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국도 2호선 확장공사, 경전선 복선화사업, 국도 19호선 건설공사,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 공사장 등 12개 구간 현장소장이 모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군은 이날 협약식에서 공정별 비산먼지 관리방안을 소개한 뒤 책임 관리도로 선정 및 조정, 비산먼지 저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도 2호선의 경우 하동~완사 구간은 극동건설(주), 하동~진상 구간은 금광기업(주), 하동~완사2 구간은 제이에스건설이, 진주~광양 복선화 3구간은 쌍용건설, 4구간 현대산업개발(주), 5구간 GS건설(주)이 각각 맡는다.

또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은 남화토건(주), 2호선 우진건설(주), 3호선 (주)오렌지이앤씨가 담당하고, 고현~하동IC 국도건설공사는 (주)우미토건, 하동~평사리 19번 국도는 한라건설(주), 비엔금성 조선농공단지조성공사는 대경공영이 관리한다.

해당 도로 관리사업장은 사업장이 보유한 고압살수차 및 환경전담 요원을 통해 공사장 구간 내 도로를 수시로 청소하고, 도로의 비산먼지 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1사 1도로 클린제 참여 사업장이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경우 군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비산먼지 지도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은 물론 민원발생의 요인이 돼 왔는데 해당 사업자들이 책임 관리를 하게 돼 주변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 하동군 기획감사실 (055)880-2043

골든타임제, 인명피해 줄이는 길

▶ 경남매일(6.25.) 발언대 발취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태풍·홍수·폭설·지진 및 가뭄 등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최근 중국 내몽골 사막화로 인해 황사 또한 단골손님으로 한반도를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달전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어 고양터미널·장성요양병원 화재, 2호선 상황실리역 전동차 충돌사고, 선릉역 고전압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지어진 아산 둔포 오피스텔이 기울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생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으며, 심각한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자연과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난은 산업발전 등으로 점차 대형화, 다중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여년 전 성수대교 사고로 출근길 시민과 학생 32명이 희생됐고, 그다음 해에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여 명의 인명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와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지붕붕괴 사고 등은 “안전소홀은 곧 대형 참사다”라는 등식을 성립게 한다.

이렇듯 재난은 선박, 터미널, 병원, 지하철, 리조트, 오피스텔 할 것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국민의 지탄과 함께 국가재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소중한 인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조직과 시

시스템은 물론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 시스템의 완벽한 구비 등 제대로 된 외양간으로 고쳐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이후 홍준표 도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여민동락(與民同樂)하는 마음으로, 선박의 형식적 점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해경, 마산해양항만청 등과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5월 한 달 간 약 2천여 개의 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해 시정지시, 긴급보수, 현지토의 및 건의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인명피해는 재난발생으로부터 1~2시간 내에 초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종 재난유형별로 개인별 행동요령을 구체화해,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를 ZERO화 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대응한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편해 전국 최초로 골든타임제를 적용, 시행하고 있다.

골든타임은 재난 발생 후 1~2시간 이내 최적의 시기에 미리 설정돼진 분야별 대응팀을 투입해 초기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와 피해확산 방지 등을 목표로 계획돼 있다. 자연재해 중 매년 빈도가 많고 피해 복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 매뉴얼을 한 예로 들면, 태풍대응 매뉴얼은 크게 상황관리와 초기대응, 이후 수습복구의 단계로 구분돼 재난대책 안전본부 가동과 동시에 추진된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든타임제 이외에 재해 예경보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우량계 등의 강우관측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산간계곡 등의 자동 예경보시설을 확충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음성 통보 지원이 가능한 방송 통신 체계 운영과 현장 재난상황 감시를 위한 CCTV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피해예방과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해발생 시 피해에 대해 광범위하게 노출돼 자연재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후 복구활동에만 주력했던 복구중심의 재난수용 단계를 거치고, 국가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현장에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재난대응 중심의 단계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 걸맞도록 방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재정보 분석센터를 구성해 방재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조사의 자동화 산지 돌발홍수 및 붕괴를 예측하는 등의 단위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하면서, 태풍뿐만 아니라 호우나 가뭄, 폭설 등의 재해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상정보와 수문, 방재 GIS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해 분야별 위험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체계화된 조직의 구성과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방재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뒷받침돼질 때 매년 반복되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이십 여년 전부터 대형참사를 빈번하게 겪고도 인명구조와 피해방지를 위한 정확한 매뉴얼이 국가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설마 무슨 일이 또 있으랴”하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한 사고 방식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의 9·11테러 당시 현장 지휘를 받은 관할 소방서장이 총괄 지휘를 했듯이 우리도 육상사고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지휘하고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은 지원토록 하는 현장 중심의 지휘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하면서 효율적인 사고 수습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는 말로 모든 재해·재난에 관해 인명구조를 비롯한 종합대응 등 정부차원의 과학화된 방재체계 정립을 기대해 본다.

■ 자료 : 도 건설방재국장



경남도, 20세기 폭스사와 테마파크 조성 MOU 체결

▶ 개발사업자 공동 발굴 등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탄력



경남도와 20세기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는 미국 현지시간 2014년 6월 20일 FOX 스튜디오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제프리 갯식 사장이 확정문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경남도는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미국 LA소재 FOX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FOX 사장단의 2회에 걸친 사업 대상지 투자환경 조사와 추가 협

의를 진행해오다가 이번 홍준표 지사의 최종 협의를 위한 방문을 통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 경제자유구역 내 704에이커(86만평) 규모에 폭스 브랜드 테마파크를 포함하여, 영화관, 아울렛 몰, 카지노, 호텔, 리조트, 해양레포츠 시설, 골프코스 등 웅동엔터테인먼트 단지 조성을 구상해 왔으며, 이번 양해각서(MOU)의 내용은 양측 협의에 따라 상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폭스 브랜드 테마파크를 위한 개발사업자(Master Developer)의 공동 발굴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계약서 체결에 상호 노력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도지사는 “그 동안 어떤 콘텐츠의 테마파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폭스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므로, 앞으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주도해갈 개발사업자(Master Developer)를 폭스사와 함께 선정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사업추진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하여 경남 미래50년 사업의 핵심이 될 글로벌 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투자유치팀 해인기업탐당 (055)211-3143



경남도, 한방 향노화산업 클러스터 첫발 뒀다

▶ 23일 경남도, 함양 제2일반산업단 첫 투자유치 MOU 체결

경남도가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에 식물공장을 이용한 수경인삼 대량생산 시설을 갖춘 (주)애그로닉스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의 하나인 한방 향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첫 투자유치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23일 오전 11시 20분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 임창호 함양군수, 박환기 (주)애그로닉스 회장, 박헌식 퓨어플러스(주)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개사와의 투자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체결로 함양군 함양제2일반산업단지에 수경인삼재배 식물공장을 신설할 계획인 (주)애그로닉스는 오는 2020년까지 33만㎡의 부지에 1583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450여 명을 신규고용이 계획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퓨어플러스(주)는 함양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함양 수동농공단지에 2015년까지 6,632㎡의 부지에 100억 원을 증설투자하게 되며, 100여 명의 신규고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경남도와 함양군은 (주)애그로닉스 식물공장 연구소를 방문, 사업타당성 검토와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또, 경남도와 함양군은 향후 기업투자에 따르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날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 함양군 지역주민 대표 10여 명이 참석해 협약체결을 축하하고, 지역발전에 큰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

홍준표 도지사는 “도내 18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도청 서부청사건립, 공공기관 이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으로 낙후된 서부경남권 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함양 제2산단 첫 투자유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애그로닉스(Agronics)는 농업의 의미인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의 합성어인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의 합성어로 농업에 기계와 전기전자 제조업의 최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농업의 첨단화를 목표로 지향하는 식물공장의 전문 브랜드이다.

이번에 건립하는 식물공장은 1년생 묘삼을 수경재배 방식으로 길러 2년생으로 만드는 것으로, 최적의 재배환경으로 생육기간을 3~4개월로 단축시켜 수확할 수 있으며, 향노화 작용을 하는 사포닌 성분 등도 노지 인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된 수경인삼 제품은 원물(수인삼), 활성화제품(수인삼포유), 기능성 식품원료 및 천연물 의약품 원료화 등 향노화 기능성 식물원료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퓨어플러스(주)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음료 전문 제조업체로 2013년 매출액 351억 원이며, 이번 투자 후 2016년에는 매출

액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유발 효과가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해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국내기업담당
(055)211-3133



경남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본격 추진

▶ 경남도 5개사업 선정, 사업별로 3년간 국비 60억원 이내 지원

경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해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뒷받침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에서 선정된 5개 사업은 거창·함양산청의 “하늘·땅·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통영·고성의 “나전칠기 연계육성사업”, 김해·양산의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부산·김해·양산·울주의 “W-line 프로젝트”,

울산양산밀양의 “영남알프스 Mountain Top”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3년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보조율 80%)되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이 우대 적용된다.

경남도는 이번 선도사업 외에도 생활권 사업으로 하동·산청의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 합천의 “한국천하명당 십승지 친환경농산 공동마케팅 및 HistoryTour”, “세계문화유산의 얼이 깃든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권현군 균형발전단장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기반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생활권 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화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생활권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균형발전단 균형정책담당 (055)211-6414



개발제한구역 내 '기준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 ▶ 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
- ▶ 규제개혁지원단회의에서 결정, 규제점수 675→542점

국토교통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하반기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 하였다.
- ②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같은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허용

-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⑤ 기 타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²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장·군수가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m², 토지형질변경 10,000m²) 미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설 설치까지 최대 1년 이상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전망이며, 이외에도 하반기에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 총점(약 3천여점)을 지속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과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일단 이 규제 완화 과제는 “용도변경”이라는 규제와 관련된 입지규제에 해당한다.

- “용도변경” 규제는 행위강도가 인허가인 B 등급이고,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대부분 금지인 1등급으로 “B1”등급이다.
- “B1” 등급의 점수는 75점이지만 개발제한 구역 용도변경은 다른 규제에 비해 국민 체감도가 큰 규제로 체감도 3을 곱한 “225 점”이 이 규제의 최종 점수이다.
- 개선 내용은 행위강도는 변함이 없지만,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특정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하는 네거티브 수준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적용범위만 변경되어 B1 → B3 등급으로 낮춰진다.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입지규제에 해당하고, 이 규제는 심의가 필요한 인허가로 A등급, 적용범위는 75%이하인 2등급으로 “A2”등급이며, 체감도 2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150”점 규제이다.

- 이번 규제완화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5.6%의 시설이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위강도는 변함없고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5.6% 완화된다. 따라서 등급 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규제점수에 차감률 -5.6%를 적용하여 $150점 * 0.944 = 141.6점$ 으로 낮춰진다.

이와 같이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규제폐지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품질개선도 관리함으로써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2



10개 도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한다

▶ 국토부,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 지자체 선정

10개 지자체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역별 재해위험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 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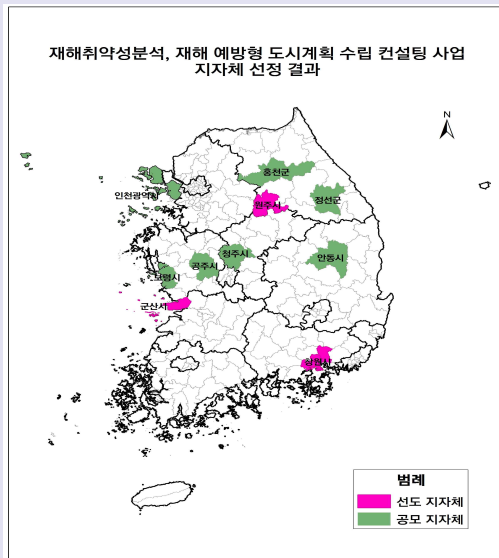
최근 10년('99~'08년) 간 재해피해가 과거 10년('89~'9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해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방재 전문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해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개발한 것을 그 주요원인으로 지적해왔다.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시설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하여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5월9일부터 2주간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0년간의 재해피해,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군산·원주·창원·공주·보령·안동·인천·정선·청주·홍천



선정된 지자체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의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선도지자체로 지정된 군산·창원·원주에는 전담팀을 배정하여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공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하여 내년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국토부 한옥설계 A부터 Z까지 책으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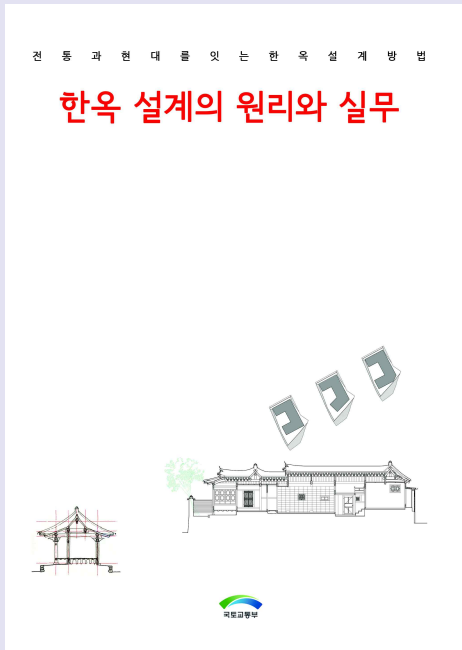
▶ 전문가용 교재 「한옥 설계의 원리와 실무」, 홈페이지에도 공개

국토교통부가 풍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한옥 설계의 원리와 실무』란 제목의 한옥 설계 교재를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본 도서는 한옥설계 실무지식을 원하는 대학원생 및 건축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한옥 설계와 관련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다.

한옥설계의 기본 이론에서부터 현장실무 관련 내용을 두루 아우르고 있는 이 책은, 국토교통부의 기획·총괄 하에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연구·집필을 맡았고, 그 밖에도 수많은 한옥설계 전문가들의 자문 및 검증을 거쳐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책의 구성은 서문, 3개 부, 그리고 부록으로 이루어졌다. 서문에서는 교재의 활용방법 및 범위를 소개하고 있으며, 1부 「한옥 설계의 원리」에서는 한옥의 설계과정, 한옥의 공간과 구조 등 주로 한옥설계의 이론을 다루고 있다. 2부 「한옥 실측, 보수설계의 실무」는 주로 기존 노후·훼손 한옥을 효과적으로 보수·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한옥의 측량 원칙·종류, 배치도에서 지붕평면도에 이르기까지의 한옥 도면 작성법 및 보수설계 개념·방법 등을 담고 있다. 3부 「한옥 신축·리모델링 설계의 실무」는 한옥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대규모 수선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의 단계별 설계 실무와 한옥 재료·설비시스템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록 「한옥의 용어」에서는 한옥 관련 기본적 용어들을 집필진이 엄선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마당」에서 내려 받거나, 정부간행물 판매센터(www.gpcbooks.co.kr)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책과 관련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3)로 하면 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5

국가고통DB를 통해 SOC사업 수요예측 정확성 높인다

▶ 국가고통DB 품질 제고 방안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6.27일(금) 개최한 「국가고통DB 품질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국가고통DB의 교통 SOC 투자정책에의 공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가고통DB사업은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개별교통조사를 통합하여 국가고통조사로 일원화하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 각종 투자평가 사업에 표준화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국가고통DB는 2003년에 최초로 배포되었고 2009년부터는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의무화되어 왔으며, 사업별 개별교통조사로 수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조사비용을 크게 절감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개통된 도로 및 철도사업을 대상으로 교통수요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고통DB를 기초자료로 활용한 사업에 정확성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고통DB를 통한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교통 SOC 투자여건의 변화, 정부 3.0시대에 따른 대외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국가고통DB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차 국가조사계획(2014년-2018년)을 수립 중에 있다. 여객분야에서는 첨단교통자료를 활용한 국가고통조사자료의 품질 개선 및 조사예산 절감, 대중교통 통합환승체계를 고려할 수 있는 교통수요예측모형의 고도화, 대규모 교통시설의 유발원단위 조사의 확대시행, 교통 SOC 정책의 활용성 증진을 위한 주말기종점통행량(O/D)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물분야에서는 물류시설투자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도시부 화물자동차O/D 구축, 화물분야 첨단자료 적용방안 연구, 전국 화물실태 조사 및 화물O/D구축의 안정화, 화물통계의 안정적 작성 및 지속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 3.0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고통DB 원시자료를 민간에도 제공함으로써 교통분야의 연구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교통 SOC 투자정책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497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 대상지 20개소 확정

▶ 생활공원 20개소 주민참여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

국토교통부는 도시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녹색여가공간인 「생활공원」대상지를 지자체들로부터 제안받아, 그 중 20개소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나대지로 서울, 경기도 등 11개 광역지자체별 20개소 278,122㎡이며(별표 참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 중 70~90%까지 국비(50억원)가 지원된다.

대상지 수는 경기도가 부천시 2개소 등 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도 장고개공원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대구·울산·전남도가 각 2개소씩, 부산·광주·충북·충남·경남도가 각 1개소씩 선정되었다.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상지수	20	2	1	2	3	1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2	4	1	1	2	1

특히, 일방적인 관 주도 조성사업이 아닌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사랑모임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이 새롭게 시도될 예정이다. 우선,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조성과정에서는 내나무·내꽃심기 등 참여행사, 준공이후에는 가칭 ‘생활공원사랑모임’ 구성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말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과정을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20개소 모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 경남 김해시 용전숲 공원 4,583㎡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2

공간정보 융복합... 표준화로 앞당긴다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정

정부와 민간의 공간정보가 상호 공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되도록, 국가기준점 및 국가기본도의 구축·활용·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이 적극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위해 공간정보 기관표준 도입, 기관표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되는 공간정보 기관표준(명칭: NGII-STD)은 국가기준점, 국가기본도, 영상정보, 국토조사 정보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관리 및 배포하는 모든 데이터를 국제표준에 따라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현황 파악과 성과활용이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사용자가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안전, 교통, 물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서비스를 손쉽게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기관표준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측량기준점*의 생산·관리 및 배포에 대한 표준화도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 측량기준점: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하는 건설공사, 수로조사 및 지적업무 시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측량의 기준 (국토부 : 국가기준점, 해수부 : 수로기준점, 지자체 : 지적·공공기준점)

기존에는 국토부, 해수부 및 지자체 별로 관리되던 측량기준점이 표준화되면, 기준점 성과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어 기준점 구축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성과의 재활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일반 사용자도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공식창구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하는 고품질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분야 정보 및 활용시스템과의 원활한 공유 및 융·복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031)210-2775

IV. 재해대책의 현황

1. 연구개발

(1) 방재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 추진

일본의 과학기술 기본정책의 방침을 나타낸 「제3기 과학 기술 기본 계획」(2006년)에는 「안전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일본을 구현」이란 큰 정책목표와 국토와 사회의 안전확보 및 생활의 안전확보라는 중간적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의 분야별 추진전략에 있어서 방재와 관련된 10개 항목을 중요한 연구개발 과제로서 내걸고 있습니다.

방재와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 과제

- (1) 지진 관측·감시·예측 등의 조사연구 (2) 지질조사 연구
- (3) 내진화나 재해대응·복구·부흥계획의 고도화 등 피해경감기술 (4) 화산 분화 예측기술
- (5) 풍수해·토사재해·설해 등의 관측·예측 및 피해경감기술 (6) 위성 등에 의한 자연재해 관측·감시기술
- (7) 재해 발생 시의 감시·경보·정보전달 및 피해예측 등 기술 (8) 구조 등의 초동대처, 응급대책기술
- (9) 재해에 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연구 (10) 시설 등에 있어서의 안전확보·사고경감 등 기술

(2) 긴급지진속보 실용화

긴급 지진속보란, 지진 발생 후 가장 먼저 도달하는 P파와 약간 늦게 도달하여 주로 파괴 현상을 일으키는 S파(주요동)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진원에 가까운 지점에서 P파를 검출한 즉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진원 위치나 지진 규모 각 지점에 있어서의 주요동의 도달시각과 진도를 예측하여 발표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구형 대규모 지진에 있어서는 긴급지진속보 제공으로부터 주요동이 도달할 때까지 수초 내지 십여초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을 이용해 열차 정지, 엘리베이터 제어, 불단속이나 책상 밑에 몸을 피하는 등 행동을 취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2007년에 기상 업무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의 경보로 자리매김하여 2007년 10월부터 일반 대상의 긴급지진속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재해예방

(1) 국토보전

다양한 재해로 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사방, 치산, 해안 등 국토보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전의 분야별 장기계획을 통합한 「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이 수립하고 삼림정비 사업과 치산사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에 「삼림정비 보전사업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의 5개년 계획이 2009년 4월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 재해 위험성의 관측 및 예보·경보

재해에 대한 조기 경계체제를 확립하여 주민의 피난이나 방재기관의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피해 경감을 꾀하기 위해 재해 위험성을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측체제가 정비·충실화 되어 왔으며, 기상청 등 유관기관에 의해 각종 자연현상의 상황에 따른 관측이 24시간체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관측 정보에 추가하여 기상청에 의해 쓰나미나 집중호우 등에 관한 각종 예보·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3) 정보·통신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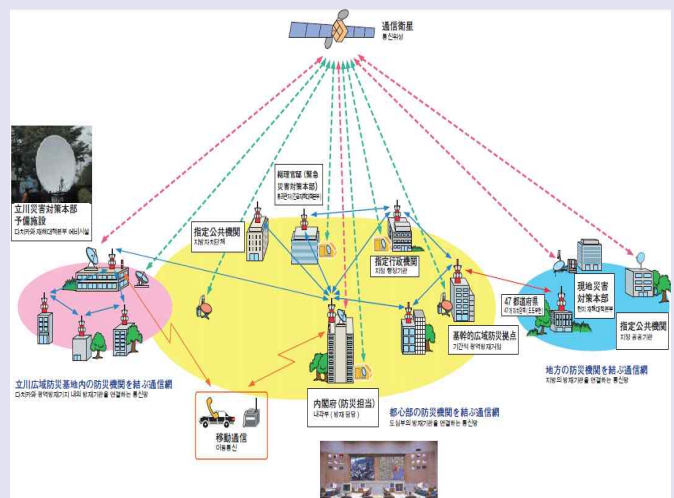
재해에 대한 조기 경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확실한 전달체제의 정비가 불가결합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과 중앙정부 및 지방의 방재기관, 보도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방재기관에서는 중앙정부 등의 기관을 연결하는 중앙 방재 무선망, 전국의 소방기관을 연결하는 소방방재무선망, 지방공공단체 산하의 방재기관이나 주민을 연결하는 도도부현, 시정촌, 방재행정무선망 등 재해대책 전용 무선통신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각부에서는 지정 행정기관, 지정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단체 간에 중앙방재무선망을 정비하여, 전화, FAX, 데이터통신, 비디오회의 헬기를 이용한 재해화상 송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현지와의 연락을 위해 위성을 이용한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부터는 지역의 방재 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서 시정촌의 위성휴대폰 등 도입을 대상으로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야외에 설치된 확성기나 주택 내부의 개별 수신기를 사용한 동시통보 무선입니다. 또한, 쓰나미나 기상 예·경보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널리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 종합방재정보시스템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부에서는 재해 피해 상황의 조속한 파악과 유관 기관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재해 대처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진피해 조기 평가기능

기상청에서 관측된 진도 정보를 수신하고, 진도 4 이상이면 자동으로 기동하여 지진 발생 후 대략 10분만에 진도 분포와 피해규모 (인적 피해 및 건축물 피해)를 추계할 수 있는 기능

② 인공위성을 활용한 피해 조기 파악기능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광범위한 관측이 가능한 인공위성의 화상을 활용함으로써 피해상황을 조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능

③ 정보 공유기능

방재기관의 방재정보를, GIS를 활용해서 공통 지도에 집약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5) 도쿄만 임해부에 있어서의 기간적 광역 방재거점

도시재생본부에 있어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제1차 결정 (2001년 6월) 에서는 도쿄권에서 대규모적이고 광역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대책활동의 핵심이 되는 현지대책본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쿄만 임해부에 있어서의 기간적 광역방재거점(아리아케노오카 지구, 히가시오기시마 지구)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리아케노오카 지구는 수도 직하지진 등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현지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수도권 광역방재의 헤드쿼터로서 기능함과 아울러, 광역 지원부대 등의 베이스캠프나 재해 의료 지원기지 등이 되고 평상시는 유관기관에 의한 방재 정보 교환이나 각종 훈련 등 재해 발생시에 대비한 활동의 장으로서 기능합니다.

히가시오기시마 지구는 수도 직하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외로 부터의 지원물자 수송을 관리함과 아울러 해상 수송, 하천 수송, 육상 수송 등에 관한 중계 기지 및 광역지원부대 등의 일시 집결지·베이스캠프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6) 피난 권고 등의 판단·전달

재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주민의 자주적 피난 외에 시정촌장에 의해 피난 권고 또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시정촌에 있어서는 피난 권고 등의 발령·전달과 관련하여 재해 긴급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느 대상구역의 주민에게 피난 권고 등을 발령해야 할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미리 매뉴얼을 마련해 두는 것이 유효적입니다.

내각부에서는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2005년에 「피난 권고 등의 판단·전달 매뉴얼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시의 피난에 대해서는 2009년에 일어난 집중호우 재해나 토사재해에 있어서 적절한 피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해정보가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은 등 피난에 관한 과제가 지적된 바가 있으므로 피난의 바람직한 모습 전반에 대해 「재해시의 피난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설치 (2010년 4월 21일 중앙방재회의 결정) 하여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 재해시 요(要) 지원자 대책

최근의 풍수해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풍수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혼자서 피난할 수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재해시 요 지원자를 이웃주민이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재해시에 인적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 3월에 「재해시 요 지원자의 피난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3월에는 참고 사례를 담은 「재해시 요 지원자 대책의 추진방법에 대해」를 작성하여 시정촌에서 전체계획(요 지원자의 피난 지원 대처방침 등을 제시한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시 요 지원자의 피난 지원 가이드라인 개요

재해 정보의 전달 체제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난 준비 정보 발령 재해시 요 지원자 지원팀 설치 인터넷, 재해용 전언다이얼 등 다양한 수단 활용을 통한 통신확보 등
재해시 요 지원자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 협조, 유관기관 공유방식을 통한 요 지원자 정보의 수집, 공유 유관기관 공유방식(개인정보의 피난 지원체제 정비를 위한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의 적극적 활용 등
재해시 요 지원자의 피난 지원플랜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 지원자 한 사람, 한사람의 피난 지원플랜 책정 방재에 강한 도시 조성의 중요성명확화 등
대피소에 있어서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피소에서 요 지원자용 창구 설치 촉진 복지 피난소의 설치, 활용 촉진 등
유관기관 간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서비스 계속 보건사, 간호사 등의 광역적 응원 요 지원자 피난 지원 연합회의(가칭) 설치 등

(8) 방재 훈련

방재 훈련은 재해 응급 활동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재체제의 실효성을 확인·검증함과 동시에 주민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방재에 대해 생각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재해대책기본법에서는 방재훈련 의무를 정함과 아울러 중앙방재회의에서 매년 훈련을 실시할 때의 기본적 개념과 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이 연계·협력하여 실시하는 종합 방재훈련의 개요를 제시한 「종합방재훈련 대강」을 결정하여 각종 훈련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1일의 「방재의 날」에는 방재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전국 각지에서 광역적이고 대규모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과거의 재해를 바탕으로 한 훈련이 일년 내내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훈련 참가자가 사전에 재해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채 훈련에 참가하고 훈련이 시작된 후에 주어진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를 하는 롤플레이팅 방식의 도상 훈련 등 실천적 방재훈련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종합방재훈련



정부 현지본부 훈련



정부 도상훈련



지역에서의 방재훈련

3. 재해응급대책

(1) 재해응급대책의 개요

구조·구급,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재해응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공공단체는 재해·피해정보의 수집·연락 및 통신 확보를 신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지역인 시정촌이나 도도부현에서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유관기관이 활동 체제를 확립합니다.

중앙 정부는 내각 정보집약 센터에서 24시간체제로 재해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대규모 재해 시에는 유관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긴급 집합팀이 총리 관저안의 위기관리 센터에 모여 피해 상황을 파악·분석한 후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국무회의나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적 대처 방침을 결정합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비상재해대책본부(본부장은 방재담당 대신)나 긴급 재해 대책본부(본부장은 내각 총리대신)를 설치하고 방재담당 대신 등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조사단을 파견하거나 중앙정부의 현지대책본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2) 광역 응원체제

지방공공단체의 대응 능력을 초월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경찰 광역긴급원조대), 소방청(긴급 소방원조대), 해상보안청, 또한 도도부현지사 등의 요청에 따라 자위대의 재해파견을 통해 광역적 응원이 실시됩니다. 또한, DMAT(재해 의료지원팀) 등을 파견하여 중상환자를 자위대의 항공기로 피해지역 외의 병원에 후송하여 구명하는 광역의료 후송도 실시됩니다.

4. 재해복구·부흥대책

(1) 재해복구·부흥대책의개요

재해 피해로부터의 복구·부흥에 있어서는 재해복구사업 등에 의한 공공적 시설의 복구 및 정비 등을 통한 단순한 원상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성에 배려한 지역 진흥을 위한 기초적 조건 마련과 더불어 재해 피해지역 부흥의 계획적 실천, 이재민의 자립된 생활 재건 대책, 이재민의 주거 확보 대책, 지역경제 부흥 대책 등에 관하여 법률·세제·예산조치 등을 통해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복구·부흥 대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내각 총리 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한신·아와지 부흥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부흥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이 본부의 설치기간 만료 후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 부흥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의 우스산 분화 재해나 2004년의 니가타현 추에쓰 지진에 있어서도 관계부처로 구성된 재해복구·부흥 대책회의를 설치하였습니다. 재해복구·부흥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연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붕괴(1995. 1월)



고속도로 복구공사



복구된 고속도로(1996. 9월)



(2)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제도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 제도는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계기가 되어 1998년에 창설된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에 입각하는 제도이며,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기반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재건을 지원함과 아울러 안정된 주민 생활 회복과 피해 지역의 조속한 부흥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완전 붕괴되는 등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하여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최고 300만엔)이 지급됩니다.

재해복구·부흥 대책의 내용

① 재해복구 사업

피해를 입은 공공토목시설, 문교시설, 후생시설, 농림 수산업 시설 등의 복구는, 나라에 의해 직접 혹은 나라에서의 보조를 받아서 행하여집니다.

② 재해용자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자, 중소기업자, 저소득자등에 대하여, 통상보다도 낮은 조건으로 각종의 용자가 행하여 집니다.

③ 재해 보상 및 재해 보험

피재 농림수산업자의 손실이 보상되며, 또 지진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④ 세금의 감면 등

피해자에 대하여, 소득세·주민세의 경감, 면제, 징수 유예등의 조치 시행.

⑤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피재 지방 공공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 지방채의 허가 등의 조치가 받아들여집니다.

⑥ 극심 재해의 지정

피해가 막대한 재해에 대해서는 「극심재해」의 지정이 행해지고, 재해복구 사업 등에 대한 각종의 특례조치가 취해집니다.

⑦ 계획적 부흥의 지원

피재한 지방 공공단체의 부흥 계획의 신속·정확한 작성과 수행에 대하여, 필요하게 응해 지원이 행하여 집니다.

⑧ 생활 재건의 지원

피재자에 대하여, 재해 조위금, 재해장해 위문금 및 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 돈의 지급, 재해원호 자금 및 생활복지 자금의 대부에 의해, 자립적 생활 재건의 지원이 행하여집니다.

다음호에 계속...

■ 자료 :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김 대 유
(주)덕성 부회장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6. 2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56호)
- 예고기간 : 2014. 6. 23. ~ 2014. 7. 13.

□ 개정이유

특급기술자의 등급기준을 상향하고,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기술력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설계·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의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 (75점 이상 → 78점 이상)
- 나. 설계·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력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60,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

■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6. 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33호)

□ 예고기간 : 2014. 6. 5. ~ 2014. 7. 21.

□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규제개혁 신문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안 제84조제5항제6호 및 제93조제1항·제2항·제4항)

- 1)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이 강화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이 제한되어 시설투자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하고자 함
- 2) 법률 개정,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현행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도 부지를 확장하고 추가되는 부지에 건축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에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완화하고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용도지역·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완화(안 별표16, 별표17, 별표19, 20, 별표23)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공장에 한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공장의 입지제한을 폐지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완화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제 완화(안 제21조제2항제8호 및 제44조제1항)

- 1)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관통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인접 부지와 함께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규모 관통대지 중 도시용지의 공급 또는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해제된 토지와 접해 있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면제하고자 함
- 2)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생산·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가능하나 생산관리지역은 비율 제한이 없는 반면, 보전관리지역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2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주변 토지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이용하는 데 애로가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비율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라.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제 완화(안 제53조제2호, 별표1의2 2.라)

-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을 현행의 2배 수준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등과 같이 환경, 안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2) 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필지 모두 연접토지와 합필하여 분할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토지 분할을 허용하던 것을, 분할된 필지의 일부가 연접토지와 합필하여 분할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촉진(안 제4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계획시설 중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활성화하여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례회·임시회 구분 없이 매년 1회 이상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나.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함. 이하 같음)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료 : 법제처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한 MPS보 설치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건설(주)
	삼표피앤씨 주식회사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2호
- 기술분류 : 건축/철근콘크리트/PC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부재를 장스팬화 하기 위한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PC보의 지상층, 지하층 시공, 철골기둥 또는 보에 접합이 편리하도록 개발된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하여 MPS보를 설치하는 시공법에 대한 것으로서, 기존의 PC보 부재의 경우, 보-기둥 접합부의 강도 및 강성 부족으로 붕괴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지상층 시공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보 부재는 경간이 10m 이 내가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본 MPS보 설치 신공법은 기존의 PC보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12~14m 장스팬에도 시공이 가능하고 단부매립철물은 보강힘 인장철근의 단부 정착성능 향상 및 철골기둥, 보부재와의 접합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MPS보 단부에서의 구조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하여 철골부재에 단순 접합하는 MPS(Modularized Pre-stressed System)보 설치공법

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썬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대성방재기술
	(주)도화엔지니어링
	(주)이산
	(주)케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대한콘설탄트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3호
- 기술분류 : 토목/토질및기초/사면 관리 및 보강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압축 코일스프링을 풀어 정착체 보호캡을 암반에 밀착시킨 후, 정착헤드와 직접 연결된 인장재를 긴장하여 썬기형 정착체가 주변 지반을 가압함에 의해 발생하는 지압력과 마찰력에 의해 지지되는 복합형으로써, 썬기형 정착체를 인장하여 설계 인장력을 확보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여 시공한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압축 코일스프링을 안전핀제거와이어로 풀어 썬기형 정착체를 연암이상의 경질암반에 밀착시킨 후, 인장재에 연결된 정착헤드를 연결하여 썬기형 정착체가 주변 지반을 가압하고 그라우팅하는 영구앵커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4년 제8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1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7건
- 심의일자 : 2014. 7. 2.(수)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4-08-01	실시설계 (적정성)	함안군 종합장사시설 (화장시설) 건립공사	· 위 치 : 가야읍 사내리 산113-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화장시설 건립(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96㎡, 화장로 3기) · 사 업 비 : 161억원(공사비 144, 기타 17) · 사업기간 : 2014 ~ 2015년	함안군 (주민 복지과)	조건부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08-02	창녕군 스포츠파크 확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녕군 (문화체육과)	조건부
2014-08-03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함양군 (문화관광과)	조건부
2014-08-04	남해군 관광개발분야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남해군 (문화관광과)	조건부
2014-08-05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통영시 (농업기술과)	조건부
2014-08-06	양산시 수질정화공원 에너지자립화사업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산시 (하수과)	조건부
2014-08-07	합천군 재해복구사업(2012년) 분석·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건설방재과)	조건부
2014-08-08	합천군 이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건설방재과)	조건부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5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6월	계	80	103,403	96,990	6,413	6.20%	
	공사	토목	38	79,061	74,024	5,037	6.37%
		건축	11	15,019	14,436	583	3.88%
		기타	10	5,803	5,348	455	7.84%
	용역	6	1,389	1,223	166	11.97%	
물품	15	2,131	1,959	172	8.09%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2014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 문 제 출)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3회	4.4~4.10	5.11	6.27	6.30~7.3	7.26~8.8	8.22
	제104회	6.27~7.3	8.3	9.19	9.22~9.25	10.18~10.30	11.14
기사 (산업기사)	제2회	4.18~4.24	5.25	6.5	6.9~6.12	7.5~7.18	8.22
	제3회	7.25~7.31	8.17	8.29	9.1~9.4	10.4~10.17	11.14
	제4회	8.22~8.28	9.20	10.2	10.6~10.10 (10.9 제외)	11.1~11.14	12.12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